

# “덜 오염된 마스크는 재사용 하세요”

### 자신이 쓰던 마스크에 한장...품귀현상에 따른 교육지책

### 대구·경북에 100만장 공급...방역현장 매일 50만장 지급

보건용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우면 자신이 사용한 마스크 중 오염이 덜 된 제품에 한해 재사용을 권고하는 내용의 정부 지침이 곧 나

올 예정이다.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정부가 긴급하게 논의를 시작한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2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



“코로나19에 무릎 꿇지 않겠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추가 지정된 대구 북구 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 의료진들이 26일 오후 병원 지하 강당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진료를 앞두고 보호복, 마스크, 고글, 이중장갑 등 개인보호구(레벨 D) 착용 실습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은 200명상을 준비해 이를 뒤인 28일 오후부터 진료를 시작할 예정이다.

리핑에서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으면 오염 정도를 본인이 판단하고, 자신이 사용하는 전제조건하에 일부 재사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새로운 지침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검토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문가들, 특히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계속적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마스크 재사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한장해 지침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용 마스크는 이날부터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판매처에 출고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이 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 50%는 의무적으로 우정산업분부와 농협중앙회, 공영홈쇼핑 등에 출하하게 된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속출하는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00만장을 우선 공급한다. 의료기관 등 방역 현장에도 매일 50만장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대구·경북 지역에는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일본 소비자들 구매를 위해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에도 매일 350만장을 공급할 예정”이라며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마스크 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 ‘전두환추징법’ 위헌 여부 가려진다...헌재 오늘 선고

### 제3자가 소유한 불법재산에 대한 압류처분 규정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의 제3자 재산추징 관련 조항을 놓고 헌법재판소가 27일 위헌 여부를 가린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불법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재산을 압류당한 박모씨(57)의 이의신청 사건 재판부가 제정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에 대해 위헌 법률심판 선고를 진행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2는 범인 외의 사람이 불법

인 사정을 알면서도 취득한 불법 재산에 대해 별도의 재판 없이 검사의 판단만으로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대통령의 큰아들 전재국씨(61)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재홍씨(64)에게 2억원을 주고 이 땅의 일부를 사들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불법재산임을 알면서 취득한 재산은 제3자를 상대로 추징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을 적용해 2013년 7월 박씨의 부동산도 압

류했다.

그러자 박씨는 “전 대통령의 불법재산인 줄 모르고 땅을 구입했다”며 서울고법에 재판에 관한 이의신청을 냈다. 또 이의신청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9조의2는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함께 신청했다.

당시 이의신청 재판에서 박씨는 불법재산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박씨가 전 대통령 아들인 제3자 명의로 매수한 정황을 알고 있었다고 보고 해당 토지를 압류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에 대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재산권,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현재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한편 헌재는 같은 날 상속순위가 제4순위에 불과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들이 사실상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도록 규정한 민법 1000조 제1항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선고와 이라크 등 위험국가에 대한 여행금지를 규정한 여권법 제26조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도 진행했다.

## 정화조 청소

### 깨끗한 물, 자연과 함께 하는 기업

노령미화사

금성미화사

061)393-3200

061)394-3200

정화조는 1년에 1회 이상 환경법에 의해 청소해야 되며, 미 청소시엔 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 단신 ●

### 양말·신발만 신은 속초 알몸 女변사자 발견

강원도 속초해수욕장 남쪽해변 앞 해상에서 알몸의 여성 변사체가 발견돼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해경은 26일 오전 8시19분쯤 속초해변 앞 해상에 사람이 있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다. 오전 8시39분쯤 해변으로부터 약 10m 해상에서 떠 있는 변사체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당시 변사체는 알몸이었으며 양말과 신발만 착용한 상태였다. 목격자는 당시 해당 여성이 바다에서 해변으로 걸어 나오다가 다시 바다로 들어가기를 두 차례 반복하다 파도에 휩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여성은 속초에 거주하는 50대 초반 여성으로 확인됐다. 해경 관계자는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진술에 의하면 타살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제주 갯바위서 낚시하던 50대 고립돼 구조

26일 제주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낚시객이 갯바위에 고립돼 구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59분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해안의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A씨(54)가 고립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해안가에서 약 40m 떨어진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중 밀물과 썰물 시간을 착각해 바닷물이 차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고립돼 구조를 요청했다.

신고를 접수한 제주해경 한림파출소 경찰관은 갯바위까지 입수한 후 튜브와 로프 등을 이용해 A씨를 구조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어 귀가 조치됐다.

### ‘확진자 발생’ 허위사실 유포자 “장난 치려고”

강원 태백경찰서(서장 신현규)는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오전 0시 35분쯤 태백시청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코로나19 현황 안내문’을 다운로드 받아 확진자란에 ‘없음’을 지우고 ‘1명’이라고 기재해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지인에게 유포한 혐의다.

허위사실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던 상황에서 급속히 확산됐고, 태백시보건소가 이를 인지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즉시 확산 경로를 역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장난삼아 작성한 파일을 친구에게 보냈고, 해당 파일을 받은 친구 또한 주변 지인에게 전송하는 등 허위사실은 빠르게 확산됐다.

### ‘12살 초등생’ 폭행혐의 태권도사범 경찰 수사

태권도장 사범이 도장에 다니는 초등학생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사범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26일 태권도장 20대 사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사범으로 있던 태권도장 수련생 B군(12)을 나무 막대기 등을 이용해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지난 2017년에서 2019년까지 3년 동안 해당 태권도장에 다녔으며, B군의 어머니는 지난해 1월 B군의 몸에서 피멍자국을 발견하고 폭행을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사범이 나무막대기 등으로 상습 폭행하거나 매트에 자신을 눌린뒤 발로 차기도 했다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또 ‘폭행 사실을 알리면 죽이겠다’고 흉기를 들고 협박한 사실이 있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